

# 일반의지의 수학적 토대와 비판주의:

## 루소 『사회계약론』 2권 3장의 해석 문제\*

김영욱 | 서울대학교

『사회계약론』 2권 3장에서 루소는 일반의지를 모두의 의지와 구별하고 그 계산법을 설명함으로써 일반의지의 실재성과 정당성을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모호한 수학적 진술이 분석의 난관이다. 우리는 일반의지의 수학적 토대에 대한 세 해석을 소개하고, 이 해석들의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함의를 생각해본다. 먼저 상식적 산술 모델로 일반의지의 억압적 형식주의를 고발한 마스터스(Masters)가 있다면, 다음으로 미적분법을 그 토대로 도입하여 형식주의에 최대한의 개념적 힘을 부여하는 필로넝코(Philonenko)가 있고, 끝으로 칸트적 요소를 통해 형식주의의 엄격함을 누그러뜨리고 돌을 화해시키는 라디카(Radica)가 있다. 하지만 연대기적으로 일종의 변증법을 구성하는 이 해석들은 개념적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역사철학적 대립을 간직한다. 그것은 계몽주의를 지탱했고 여전히 일반의지에 대한 회고적 관점을 지배하는 낙관주의와, 필로넝코로 하여금 일반의지의 진정한 정치철학적 효과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세기를 끝내고 새로운 세기를 열었는지 이해하게 해주었던 비판주의의 대립이다.

**주제어:** 루소, 필로넝코, 『사회계약론』, 일반의지, 모두의 의지, 미적분, 낙관주의, 비판주의

### I. 문제제기: 일반의지와 『사회계약론』 2권 3장의 수학적 언어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는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의 핵심적인, 동시에 가장 문제적인 개념이다.

\*원고를 읽고 진지한 조언과 격려를 보내준 김현우, 윤상원, 이상인, 이우창에게, 그리고 영어 요약문을 교정해준 이지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것은 왜 핵심적인가? 루소(Jean-Jacques Rousseau)에게 정당한 정치체(*corps politique*)의 유일한 형식은 공화정, “어떤 행정형태를 가지든지 법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국가(Rousseau 1964, 379)”다. 그리고 공화정을 규정하는 법은 주권자로서의 인민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의무, 자신과 맺은 약속으로 정의된다. 즉 법은 주권자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 의지는 일반의지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하려고 의지할 때 인민은 개별자 각각이 아니라 전체로서 의지하며, 그 의무를 부여받는 대상 또한 개별자가 아니라 전체이고, 그 의지의 내용 또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치체 안에서 법이 법인 것은 그것을 우리 모두가 원했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적용받기 때문이며, 법의 내용이 우리 중 일부에만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은 전체의 전체에 대한 자기관계, (그리고 전체란 하나이므로) 하나의 하나에 대한 자기관계여야 한다. 역설적으로 오직 그럴 때에만 어떤 시민도 정치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정치체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개별의지(*volonté particulière*)를 실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닌, 나의 일반화된 “공동의 자아”(moi commun)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별자는 일반성의 형식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전체에 결합되고, 공적인 것은 그러한 결합을 통해서만 구성될 수 있다. 일반의지란 개별자와 전체의 결합원리이며, 그러므로 “공적 인격”(personne publique)이라 불리기도 하는 정치체의 구성원리다.

그것은 왜 문제적인가? 우선 충분히 엄밀하지도, 충분히 체계적이지도 않은 언어가 문제다. 하지만 루소의 언어는 그의 사유의 허술함을 입증한다기보다, 그가 새로운 언어로 형이상학적이자 현실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실제로,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이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별적인 것을 통해 일반적인 것이 실현되고 동시에 일반적인 것을 통해 개별적인 것이 실현되는지 설명하는 일에는 여러 논리적인 질문이 뒤따른다. 일반의지는 실재하는 것인가, 이름만 가진 것인가? 실재한다면 개별자들의 의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개별자들의 의지는 어떻게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일반의지에 통합된다는 말인가? 한편에서는 일반의지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옹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의지의 모순과 불가능성을 고발한다.<sup>1)</sup> 그런데 루소의 경우 이론적 논쟁은 정치적 논쟁

1) 한국어 논문 중 일반의지의 난점들과 어려움을 학문적 솔직함과 호의를 가지고 정면으로 다룬 글로는 장세룡(2000)을 참고할 수 있다.

과 거리두기도 어려웠다. 프랑스혁명과 이후 현대사의 부침 속에서, 어떤 이들이 일반의지를 인민주권의 핵심개념으로 볼 때, 다른 이들은 일반의지의 불가능성이 루소식 공화주의의 불가능성을 증명한다고 본다.<sup>2)</sup> 또한 일반의지에 내리는 이론적 평가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라는 양 극단의 체제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를 진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별개일 수 없었다.<sup>3)</sup> 언어, 철학, 정치의 층위들이 서로 완전히 구별되지 않은 채 다양한 맥락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와 기능을 고정시키고자 노력한 역사가 『사회계약론』과 일반의지의 해석의 역사다.

이러한 해석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회계약론』 2권 3장이며, 이 짧은 텍스트의 이념적 함의는 거기에 담긴 수학적 진술을 규정함으로써만 접근할 수 있다.

“일반의지가 틀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2권 3장은 “일반의지는 파괴 불가능하다”는 명제를 설명하는 4권 1장과 함께 『사회계약론』에서 명시적으로 일반의지의 문제만을 다루는 드문 장이다. 일반의지와 관련된 다른 장들은 정치체, 주권, 법, 인민 등의 다른 주요개념들과 일반의지의 관계를 묻는다. 두 장의 제목은 전자가 일반의지의 인식론적 가치 혹은 일반의지의 무오류성을, 후자가 일반의지의 존재론적 가치 혹은 일반의지의 실재성을 논증하리라는 것을 예상케 한다. 그리고 일반의지의 무오류성과 실재성은 루소 정치철학의 다른 개념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므로 이 두 장의 논증이 그만큼 엄격하리라고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4권 1장은 정치체 쇠락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지는 언제나 실재한다는 선언에 그칠 뿐이다. 먼 과거의 초기사회와 달리 이제는 일반의지가 쉽게 파악되거나 실현되지 않음에도, 일반의지는 회피되고 있을 뿐 “언제나 불변하고, 변질될 수 없으며, 순수하다(Rousseau 1964, 438)”는 것이다. 이와 달리 2권 3장은 일반의지의 무오류성과 실재성을 한꺼번에 증명하려는 듯한 태도를 품고 있다. 그것이 동시에 증명되어야만 한다면 이러한 논증의 불균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자는 혼란에 빠진다. 겨우 한쪽을 넘기는 간략함이 해석의 의욕을 감소시킨다면, 난데없이 사용되는 수학적 언어들과 이에 대비되는 느슨한 논증은 해석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우선 이 곤란함을 경험하고 그 이유를 선입견 없이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석을 제외한 2권 3장의 전문을 번역, 인용할 것이다. 독자들

2) 루소와 공화주의의 관계는 스펙토르(Spector 2011, 173-203)와 김용민(2016)이 포괄적 관점을 제공해준다.

3) 이에 대해서는 스펙토르(Spector 2011, 51-71)가 효율적으로 개괄한다.

은 이 장이 손쉬운 해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까다로움은 논증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수학적 계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단순한 산술적 진술처럼 보이는 것을 그저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사회계약론』 전체의 논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이 정치철학서에 최소한의 독창성을 인정하려 한다면 수학적 언어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해석이 개입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필로넝코(Alexis Philonenko)에 의해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실현되었던 해석의 다양성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봄으로써 일반의지의 이론적 토대와 급진적 함의를 다시 생각해보려 한다. 필로넝코의 해석과 대비되는 마스터스(Roger D. Masters)와 라디카(Gabrielle Radica)의 해석은 우리를 지적으로 편안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낙관주의적이다. 반면 저명한 독일 관념론 전문가가 일반의지를 18세기 미적분이론을 모델로 설명하며 일반의지의 이념적 의미를 전복시킬 때, 그 불편함과 절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소의 가장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기획으로 정의하는 정치철학 안에서조차 그가 얼마나 계몽주의적 낙관주의의 반대편에 서있었는지를 확인케 한다. 그런데 이 비관주의의 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너무나 낙관적이었던 한 시대의 종언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 II. 기초적 독해

### 3장. 일반의지가 틀릴(error) 수 있는가.

앞의 논의로부터, 일반의지는 항상 바르며(droite) 언제나 공적 이로움을 향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하지만 그로부터 인민의 심의(délibérations)가 항상 같은 곧음(rectitude)을 갖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원하지만,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항상 아는 것은 아니다. 인민을 부패시키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지만 종종 속일 수는 있다. 바로 그때 인민이 나쁜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모두의 의지(volonté de tous)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는 오직 공동의 이익에 몰두한다. 모두의 의지는 사적인 이익에 몰두하며 개별의지의 합계(une somme de volontés particulières)일 뿐이다. 하지만 이 의지들에서 서로 상쇄되는 더 큰 것들과 더 작은 것들(les plus et les moins qui s'entre-détruisent)

을 빼면, 차이들의 합계(somme des différences)로 일반의지가 나온다.

만약 인민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suffisamment informé) 심의할 때 시민들이 서로 어떤 의사소통(communication)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수의 작은 차이들로부터(du grand nombre de petites différences) 언제나 일반의지가 도출될 것이고, 심의는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인민이 큰 회합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술책을 부리고 부분회합들(des associations partielles)<sup>4)</sup>을 만들 때, 이 회합들 각각의 의지가 그 안의 일원들에게 일반적인 것이 되고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것이 된다. 그때 우리는 투표자가 더 이상 사람수만큼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회합의 수만큼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차이들의 수가 줄어들수록 결과의 일반성도 감소한다. 결국 이런 회합들 중 하나가 다른 모든 회합들보다 우세할 정도로 커지면, 당신은 더 이상 작은 차이들의 합(une somme de petites différences)이 아닌 유일한 차이 하나를 결과로 갖게 된다. 그때 더 이상 일반의지란 없고, 우세한 의견이라고 해봐야 어떤 개별적 의견일 뿐이다.

그러므로 일반의지의 진술을 잘 얻기 위해서는 국가 안에 부분사회(société partielle)가 없는 것, 그리고 각 시민이 오직 스스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위대한 리쿠르고스(Lycurgue)의 유례없이 숭고한 제도였다. 솔론(Solon), 누마(Numa), 세르비우스(Servius)가 그랬듯이, 부분사회가 있다면 그 수를 늘려야 하고 그들 사이의 불평등을 방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의지를 항상 명확하게 하고, 인민이 결코 속지 않도록 하는 유일하게 좋은 예방조치다(Rousseau 1964, 371-372).

인용문에 대한 기초적인, 그러므로 결코 최종적이지 않은 해설을 시도해보자. 첫 문단에서 일반의지는 인민의 심의와 대립한다. 일반의지는 자신의 목적(“공적 이로운”)을 “바르게” 지향한다. 그것은 두 점을 최단거리로 잇는 직선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하지만 인민의 심의가 항상 그와 같은 “곧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의지는 직선으로 공익을 “향하”지만, 인민의 심의는 방황할 수 있다(“errer”의 이미지). 여기에서 일반의지는 인민이 어떤 것을 심의할 때 그러한 판단의 규범 혹은 정당한 원

4) 우리는 프랑스어 ‘association’을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빈도가 줄어든 ‘회합’이라는 말로 옮겼다. 『사회계약론』에서 이 단어는 구성원들의 단순한 모임인 “응집”(agrégation)과 구별되어 구성원 각각의 성질과 완전히 다른 결합의 효과를 가지는 일종의 화학적 합성을 지시한다. ‘회합’과 ‘응집’은 일상어에서뿐만 아니라 화학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선택되었다. 즉 『사회계약론』의 과학적 토대는 수학만이 아니다. 루소 정치철학과 당대 화학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베르나르디(Bernardi 2014)를 참고하라.

리로 규정된다. 이러한 규범은 인민의 오류와는 상관없이 실재하며 항상 정당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는 길은 무한대이고 결국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는 그러한 위험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단 하나의 직선으로 존재한다. 즉 직선으로서의 일반의지는 일반의지의 진실과 실재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일반의지와 대립하는 것은 “모두의 의지”다. 일반의지와 심의의 대립이 기하학적 이미지를 가진다면, 일반의지와 모두의 의지의 대립은 산술적이다. 일반의지의 지향점은 오직 공익이다. 반면 모두의 의지는 어디까지나 사적인 개별의지의 “합계”일 뿐이어서 공적인 차원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데 일반의지와 모두의 의지 사이에는 어떤 변환식이 있다. 모두의 의지를 구성하는 개별의지들에서 “서로 상쇄되는 더 큰 것들과 더 작은 것들”을 뺀 결과들을 더하면 일반의지가 도출된다. “차이들의 합계”라는 말이 현대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해선 안 된다. “차이”는 여기에서 ‘뺄셈의 결과’라는 뜻으로 쓰였다.<sup>5)</sup> 즉 일반의지는 개별의지들에서 결국 의미를 갖지 못할 요소들을 제거한 결과의 합이다. 이 문단은 보기보다 이해가 쉽지 않다. 어차피 결국 “서로 상쇄되는” 것이라면 왜 개별의지의 단순한 합이 일반의지가 되지 못할까? “서로 상쇄되는” 것들을 개별의지들에서 우선 뺀 다음 그 결과들을 더하는 것과 그러한 사전 뺄셈작업 없이 개별의지들을 더하는 것이 무슨 차이를 만들어낸단 말인가? 아무튼 산술로서의 일반의지는 앞의 기하학적 일반의지와 달리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의 종합의 차원을 표현한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심의가 일반의지를 도출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설명한다. 그 이유는 “부분사회”로 인해 “많은 수의 작은 차이들”이 소수의 큰 차이들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부분사회는 말 그대로 전체에 이르지 못한 채 자신의 일반성을 주장하는 집단을 뜻한다. 하지만 산술적 진술의 맥락에서 이 단어가 어떤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뜻하는 부분합(somme partielle)에 호응한다는 사실을 지적해두자. “일반성”의 필요조건은 “차이들의 수”, 그러니까 “차이”로 규정되는 의견들의 많음이며, 일반의지는 이런 “작은 차이들의 합”이다. 여기에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

5) 디드로(Denis Diderot)와 달랑베르(J.L.R. d'Alembert)의 『백과사전』(*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차이”(Différence) 항목에서는 산술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더 큰 양에서 더 작은 양을 뺀 때, 남는 것을 ‘차이’라고 부른다.”

고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는 것이 이 “차이들의 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조건처럼 보인다.

마지막 문단은 “그러므로” 일반의지의 두 가지 조건을 정리한다. 부분사회의 부재와 시민들 각자의 자율적 판단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은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세계에서의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동원된다. 부분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이 부분합들의 수를 최대한 늘리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기초적인 독서의 결론을 정리하자. 일반의지는 경험적 차원(심의)과 구별되는 실재성과 정당성을 가진다. 경험적 개별의지들을 단순히 합해서는 일반의지가 도출되지 않으며, 그 합에는 어떤 뺄셈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의지의 일반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의지의 구성원소들이 유의미한 부분합을 만들지 못하게 고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일반의지의 일반성은 한편으로는 단순합계에 선행하는 어떤 가공을 전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원소들이 부분적인 합을 구성하는 가공을 배제한다. 이것이 이 장에 대한 순진한 독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루소의 정치철학 안에서 이 결론들이 모순 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

### III. 단순한 산술의 위험: 마스터스(R.D. Masters)

실제로 『사회계약론』 2권 3장은 루소의 어떤 정치적 지향,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표명할 뿐 정교한 분석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지향은 일반의지는 개별의지들의 단순한 합,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로 쉽게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실체이며, 정치체가 하나의 공적인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성을 자임하는 하위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간략하게 제시된 수학적 진술은 책의 다른 부분들에 의해 부연되지 않고서는 상세한 논리를 통해 이해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논평들은 2권 3장의 서술을 세세하게 따지기 보다는 거기에서 일반의지와 모두의 의지를 구별하는 루소의 의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sup>6)</sup>

6) 예를 들어, 『사회계약론』에 대한 표준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드라테(Robert Derathé)의 책

하지만 모호하고 단순해 보이는 것을 정식화하는 것에서 모든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다. 1968년 마스터스는 『루소의 정치철학』(*The Political Philosophy of Rousseau*)에서 그러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그가 2권 3장의 수학적 진술을 해석하는 상식적인 길을 그대로 소개해 보겠다. 마스터스는 시민 A가 원하는 것이 {a, b, c, d}이고 시민 B가 원하는 것이 {d, e, f, g}라면, A와 B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d만이 공동의 이익으로서 일반의지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A와 B의 개별이익을 규정하게 된다고 설명한다(Masters 2002, 375). 이 설명의 장점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도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d는 “공동의 이익”이라 불리는 것을 말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각 시민은 d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요소임을 알고 나머지 요소들을 공적으로 원하길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통해 나머지 요소들을 빼고 d만을 법의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의지의 실현이 된다.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루소의 수학적 진술들을 검토해보자. 두 번째 문단에서 “서로 상쇄되는 더 큰 것들과 더 작은 것들”(A의 a, b, c와 B의 e, f, g)을 뺀 “차이들의 합”이란 동일한 d를 합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d를 제외한 요소들이 결국 “서로 상쇄”된다면 모두의 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 결과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요소들이 그런 식으로 저절로 “상쇄”되는 게 아니라면, 단순한 합으로서의 모두의 의지란 a부터 g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지인가? 이 경우 모두의 의지가 A와 B의 모든 의지를 충족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d만을 원하는 일반의지보다 우월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설들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마지막 이해의 가능성이 남는다. 모두의 의지란 사실 서로 모순적인 요소들(예를 들어 a와 e, b와 f의 모순)을 동시에 원하는 상태여서, 이 때문에 공동체의 d에 대한 의지가 방해받고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런 교착상태를 방지하려면 어떤 합으로 일반의지를 구성하기 전에 서로 충돌하는 모든 요소들을 먼저 “상쇄”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단에서 “일반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차이들의 수”라는 것도 이 모델에 근거해 설명해보자. 일부 시민들이 “부분사회”를 만들어 자신들에게만 공통적인 c와 d를 전체의 의지처럼 강요하면, 그들과 d만을 공유하는 다른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c까지 인정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체의 의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루소의 다수결원리 비판과도 호응한다

---

에서 2권 3장은 직접 분석되지 않는다. 루소의 계약이론과 주권이론에 대한 방대한 설명을 통틀어서도 이 장은 부분사회에 대한 루소의 불신을 보여주는 텍스트 중 하나로 단 한번 지시될 뿐이다(Derathé 1950, 306).

(Rousseau 1964, 359). “상쇄”와 “수”에 대한 이런 설명은 앞선 우리의 상식적 독해를 합리적인 모델을 통해 부연한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가 『사회계약론』의 전체기획 안에서 일반의지의 이념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다. 그러므로 수학적 진술의 정합성만이 아니라, 그 정치적 의미까지 따져보아야 한다. 마스티스 모델에 근거한 설명은 우선 일반의지의 강력한 실재성과 선험적 정당성을 전제하고 있다. 즉 일반의지의 대상이 되는 공동의 이익  $d$ 가 정치적 공동체의 유일한 진실로서 모든 개인에게 선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의지의 도출 이전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쇄”도 불가능할 것이며, 무엇보다 단순한 다수결의 이미지인 모두의 의지와 구별되는 일반의지가 있다는 생각도 성립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반의지의 대상이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일반의지를 도출하는 “상쇄”의 과정 안에서 개별의지는 온전한 주체적 통합을 실행하기보다는 조각의 객체로서 박탈을 겪게 된다. 오로지  $d$ 만을 남겨두기 위해  $a, b, c$ 는 조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 게다가 시민 A에게  $a, b, c$ 는  $d$ 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어서, 일반의지 속에서 A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귀결로 인해 일부 자유주의 지지자들은 일반의지에서 개인에게 억압적인 정치이론을 본다.<sup>7)</sup> 예를 들어 2차 대전의 악몽이 생생했던 1952년, 텔먼은 루소의 일반의지가 20세기에 번성한 “전체주의적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주장했다(Talmon 1960, 38-49). 일반의지는 선험적으로 확정된 진실이기에 토론을 통해 상대적 진실을 구성해가려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념과 충돌한다. 이러한 일반의지의 절대성 앞에서 개별자들은 그것을 사유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결국 실재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절대적 진실을 전제함으로써 일반의지의 신봉자들은 맹목적인 목적론에 빠져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정당화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는 일에 극도로 민감한 이 신랄한 비판자는, 루소가 일반의지에 “수학적 진실”의 위상을 부여하려 한다고 지적한다(Talmon 1960, 41). 텔먼의 이러한 지적을 섬세하게 읽어야 한다. 그는 “수학적 진실”의 비유를 통해 일반의지 개념에 절대적 실재성과 진실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고발하는 동시에, 『사회계약론』 2권 3장의 불충분한 수

7) 대표적인 논평자로는 러셀(Bertrand Russell)을 비롯해, 마레즈코(Jan Marejko), 크로커(L. G. Crocker), 텔먼(J.L. Talmon) 등이 있다.

학적 언어를 상기시키며 그러한 실재성과 진실성이 제대로 논증되어 있지도 못함을 비꼬고 있는 것이다.

텔먼의 고발 이후 16년이 지나 더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마스터스의 경우 루소에게서 곧장 전체주의의 기원을 보길 주저한다. 하지만 그는 정교한 연구의 결론에서 “루소 체계의 실패”를 말하며, 지금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의지의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Masters 2002, 479-480). 그것은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이 순전히 형식적이라 실질적 목적을 부여하는 일에 무능하다는 것이다. 즉 일반의지 개념은 공동의 *d*가 있다는 것을 상정한 다음 그것을 찾고 의지하라고 요구할 뿐, *d*가 무엇이어야 하고 *d*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 문제점에 의해 『사회계약론』은 20세기 전체주의의 기원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종류의 전복”의 위협에 스스로 노출된다. 마스터스에게도 2권 3장의 수학적 진술은 일반의지의 이러한 형식주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가 될 것이다.

단순한 모델에 근거해 볼 때 일반의지의 수학적 형식주의는 억압적이며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박탈한다. 그리고 이 결론이 정당하다면 『사회계약론』의 근본기획은 붕괴된다. 루소는 자신이 고안한 정치의 기술을 “각자가 모두와 결합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자신에게만 복종하기에 여전히 전만큼 자유로운 회합의 형태(Rousseau 1964, 360)”, 즉 정치적 결속과 자유의 보존을 양립가능하게 하는 결합형식을 찾으려는 시도로 정의한다. 그런데 『사회계약론』 2권 3장의 수학적 “궤변”은 루소의 정치철학 안에서 시민의 자유가 명목상으로만 이상화될 뿐 결코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동시에 이 자유는 허술한 수학적 논변에 간혀 실질적 내용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개별의지와 일반의지, 모두의 의지와 일반의지, 그러니까 루소와 프랑스 공화주의의 핵심논증인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관계는 이 텍스트의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진술로 인해 위협받는다. 일반의지는 결국 개별의지의 부정일 뿐인가? 사적인 의지들의 단순합인 모두의 의지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인가? 우리가 마스터스의 모델을 통해 얻은 교훈은, 이 질문들에 너무 간단히 답하지 않으려면 일반의지의 실재성과 정당성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일반의지의 위상을 표현하는 “수학적 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IV. 적분모델의 곡예와 역량: 필로넝코(A. Philonenko)

프랑스의 독일관념론 철학사가인 필로넝코는 1984년 『장-자크 루소와 불행의 사유』(*Jean-Jacques Rousseau et la pensée du malheur*)라는 세 권짜리 연구에서 루소 철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필로넝코는 카시러(Ernst Cassirer)가 문을 연 루소와 칸트(Immanuel Kant)의 관계를 루소와 관념론 일반의 관계로 확장하고, 그들 사이의 영향과 긴장이 개념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분석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에서 발생한 사유를 통해 루소를 이해하려는 시도이지만, 필로넝코가 결과론적 회고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는 “제네바 시민”의 사상이 관념론에 대해 가지게 될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여러 정치적, 이론적 상황들에 의해 루소의 텍스트 위에 쌓인 고정관념들을 청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해 루소의 글과 생각은 필로넝코의 정직한 독서를 통해 그것들이 생산되고 소비된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동시대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본래 위치를 부여받는다. 현대 루소연구의 기본요구인 철학적 체계화에 답하는 마지막 중요한 응답자로서, 이 철학사는 루소 철학을 섬세하면서도 확고한 “불행의 사유”로 규정한다. 그 결과 루소의 사유가 어떻게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불행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계몽주의의 낙관론적 세계관을 붕괴시켰는지, 그리고 루소의 깊은 절망으로 인해 어떻게 새로운 사유의 지평이 열렸는지가 풍부하게 묘사된다. 3권 『절망의 신격화』(*Apothéose du désespoir*)에 담긴 일반의지에 대한 분석 또한 이러한 전체기획의 일환이다.

필로넝코는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사회계약론』 2권 3장을 일반의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논증으로 보고 한 챕터 전체를 짚은 텍스트 분석에 바치고 있다(Philonenko 1984, 25-44). 그가 보기에 일반의지의 형식주의는 미적분이론과의 관련을 통해서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는 우선 이러한 작업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정황증거들을 앞세운다. 필로넝코는 17세기에 뉴턴(Isaac Newton)과 라이프니츠(G. W. Leibniz)에 의해 정식화된 미적분이론이 18세기에 여러 사상가들에게 보급되어 활용되었음을 언급한다. 루소 또한 미적분이론을 알고 있었다. 그가 1736년경 책을 주문하기 위해 쓴 어느 편지에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여러 수학이론의 보급에 기여한 라미(Bernard Lamy)의 『수학의 요소』(*Eléments des*

*mathématiques*)가 있으며(Rousseau 1974, 14), 라미와 수학에 대한 루소의 관심은 『고백』(*Les Confessions*)에서도 확인된다(Rousseau 1959, 179, 238). 특히 그가 1756년 볼테르(Voltaire)에 맞서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세계관을 옹호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Rousseau 1974, 35-53). 그러나 이 사실들이 루소가 미적분을 진지하게 연구했음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필로넝코는 연결고리의 느슨함을 인식하면서도, 칸트를 비롯해서 당대 여러 사상가들이 미적분을 엄밀하지 않은 방식으로 철학이나 사회과학에 응용하고 있었다고 덧붙인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수학이론에 대한 설익은 참조를 정당화하는가? 필로넝코는 현대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정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2권 3장의 수학적 토대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필로넝코는 모두의 의지와 일반의지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한다. 모두의 의지는 “어떤 한정된 집합 안에서 개별적이고 같은 방향(*même sens*)을 가진 요소들을 더한 것(Philonenko 1984, 31)”이다. 이 추상적 진술에 대한 예를 생각해보자.  $\{-2, -1, 3, 4, 5\}$ 라는 집합이 있을 때, 모두의 의지의 계산방식은 음과 양의 요소들을 따로 더해서  $\{-3, 12\}$ 라는 집합으로 단순화한다. 결국 이 계산은 다수결원리로 환원되며, 다른 “방향”을 가진 소수의 의견은 묵살될 수밖에 없다. 필로넝코는 “실용주의적 정치사”가 오직 이러한 방식의 정치적 합의만을 안다고 비판한다. 일반의지는 이러한 단순한 합의가 아니다. 그렇다면 일반의지와 모두의 의지를 구별하게 하는 연산, 즉 개별의지들에서 “서로 상쇄되는 더 큰 것들과 더 작은 것들”을 빼고 그 차이들을 더하는 연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필로넝코는 자세한 설명 없이 이 표현이 “오류보정”(compensation des erreurs) 개념을 참조한다고 본다(Philonenko 1984, 31). 오류보정이란 라이프니츠 미적분법의 이론적 함의를 탐구한 18세기 수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개념이다.<sup>8)</sup> 라이프니츠가 미적분계산에  $dx$  등으로 표기되는 미분소, 즉 0이 아닌 무한히 작은 양을 도입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개념상 미분소는 값이 고정된 수가 아니다. 그런데 한정되지 않은 수를 등식에 도입하고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가? 당시 수학자들은 이러한 조작이 등식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미분소를 도입하여 계산한 결과들은 끊임없이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다. 오류보정을 고안한 수학자들은

8) 오류보정”에 대해서는 지스피·이유슈크비치(Gillispe and Youschkevitch 1979, 153-162, 237-240), 블레(Blay 1986), 앤더슨(Andersen 2011)을 참고하라.

미분소의 사용이 계산에 오류를 발생시키긴 하지만, 미적분법에는 결과를 산출하면서 오류를 보정하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했다. 필로넝코는 오류보정을 간단하게 언급하며 블라발의 연구(Belaval 1960)를 참조한다. 그는 블라발의 연구가 라이프니츠에게서 암시적으로 형성된 오류보정 개념을 추적하기에, 최신수학이론을 폭넓게 섭렵하지 못했던 루소와 오류보정의 관련을 정당화해주시리라고 여기는 것 같다. 그리하여 “서로 상쇄되는 더 큰 것들과 더 작은 것들”은 단순한 산술적 과정이 아니라 미적분이 수행한다고 여겨졌던 오류의 자동보정을 지시하게 된다.

일반의지의 이론적 모델이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라면,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개별의지는 미분소와 관련하여 규정될 것이고, 일반의지는 적분계산의 결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의지와 미분소의 관련에 대해, 필로넝코는 “특수한 개인의 의지는 다른 개인의 의지에 대한 어떤 작은 차이의 표현으로 간주”되며 “일반적 이익이라는 공통목적 안에서 이 의지들은 동일하다”고 설명한다(Philonenko 1984, 31-32). 이 알쏭달쏭한 진술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보자. 각 개별의지는 마스터스가 설명하듯이 공동의 이익  $d$ 와 기타 요소들 ( $a, b, c, e, f, g, \dots$ )의 조합이 아니라, 어떤 기본욕구  $d'$ 와 극히 작은 차이들의 합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각 개별의지를 형성하는 차이들은 단지  $d$ 와 직접 계산가능한 또 다른 의지들로 규정되지 않고, “공통목적”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작은”) 요소로 규정된다. 이런 모델을 따르면 하나의 개별의지는  $\{a, b, c, d, \dots\}$ 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d'+da+db+\dots$ 처럼 정식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의지는 이렇게 정의된 개별의지들을 적분하여 얻어진다. 그러므로 텍스트에서 “차이들의 합” 혹은 “작은 차이들의 합”<sup>9)</sup>이란 표현은 적분으로서의 일반의지를 지시한다.

필로넝코는 2권 3장 세 번째 문단에서 강조되는 부분사회와 일반성의 문제 또한 적분계산의 차원에서 더 잘 해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Philonenko 1984, 33-34). 이때 분석되어야 할 핵심적인 문장은 “차이들의 수가 줄어들수록 결과의 일반성도 감소한다”이다.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의 관계가 적분의 관계라면, 개별의지들은 이론적

9) 여기에서 18세기에 “차이”라는 단어가 ‘뺄셈의 결과’ 외의 다른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해야겠다. 당시 수학적 언어에서는 “차이”(différence)가 미분소 혹은 미분을 지칭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사전』 “미분계산”(Calcul différentiel) 항목에는 “ $xy$ 의 différence 는  $y dx + x dy$  이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으로 무수히 많은 “수”의 “작은 차이들”이어야 한다. 불연속점이 속한 구간에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은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분되기 위해 개별의지들이 일종의 연속함수를 그려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차이로서의 개별의지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몇몇 개별의지들이 그들끼리 모종의 통합을 이루어 어떤 구체적인 양을 형성했음을 뜻한다. 다시 구분구적법의 언어로 표현해보자면 이것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무한히 작은 폭을 가진 사각형들의 합으로 생각하려 할 때 어느 한 부분만 고정된 넓이의 사각형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다. 개념적으로 부분사회란 전체의 적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사각형으로 이해된다. 부분사회는 전체를 포괄해야 하는 일반의지의 일반성(곡선 아래의 온전한 넓이) 안에 부분적인 일반성(특정 사각형의 넓이)을 미리 설립함으로써 일반의지가 일반성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일반의지는 전체만을 대상으로 삼기에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일반의지를 설명하는 수학적 언어를 라이프니츠의 적분이론을 토대로 이해함으로써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의 관계가 새롭게 규정된다. 앞에서 우리는 일반의지를 구하는 “합”에 대한 간편한 도식이, 개별의지에 대한 일반의지의 초월적 권한을 정당화할 위험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의 관계가 미분소와 적분의 관계라면, 일반의지의 초월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은 원리상 제거된다. 적분계산을 통해 더해지는 요소들은 자신의 어떤 것도 박탈당하지 않고 온전히 통합되기 때문이다. 적분이 산출하는 넓이는 무한히 좁은 폭을 가진 사각형들을 있는 그대로 포함한다. 필로넝코는 이때 일반의지가 개별자를 강제하는 “본질”일 수 없으며, 오히려 라이프니츠적 의미의 “실체”라고 설명한다(Philonenko 1984, 38). 즉 일반의지는 시민 각자를 외부에서 규제하는 것이라기보다, “시민을 각 계기로 갖는 급수의 법칙”일 뿐이다. 게다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된 일반의지는 개별의지들 사이의 차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개별의지들의 차이는 개별의지의 일반의지로의 통합을 위협하는 요소라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통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조건이 된다. 마치 미분소의 도입이 구적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과 같다.<sup>10)</sup> 개별의지들을 규정하는 “오류”들은 적분의 보정을 거쳐 개별의지들의 완전한 통합체인 일반의

10) 실제로 루소(Rousseau 1974, 167)가 훗날 자신의 정치이론을 되돌아보며 그것을 구적법에 비유한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법을 인간 위에 두는 통치형태를 발견하는 것, 나의 옛 생각이 품고 있었던 바로 이것이 기하학에서 구적법의 문제나 천문학에서 황경의 문제에 비교할 수 있는, 정치학에서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의지에 전체주의의 혐의를 두는 것은 그것의 개념을 불완전하게 파악했다는 증거다. 필로넝코는 전체주의를 부분이 전체임을 자임함으로써 다른 부분을 억압하는 이념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오직 적분으로서의 일반의지만이 원리적으로 전체주의의 위험을 제거할 것이다. 전체주의의 위험에 직면하는 것은 결국 다수결원리로 수렴되는 부분사회와 모두의 의지다.

적분으로서의 일반의지는 초월적이지도 본질적이지도 않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도 일반의지는 “작은 차이들”인 개별의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실체”를 형성한다. 필로넝코는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일반의지의 실재성과 정당성을 통해 그것의 이론적 역량을 추적한다(Philonenko 1984, 38-44). 먼저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의 화해 문제가 새로운 해결의 가능성을 얻는다. 필로넝코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에 동일한 목적(선)을 부여함으로써 둘이 각기 다른 길을 따라 목적에서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일반의지의 이론적 구조에서는 개별적인 것, 개인이 “보편적인 것”, 전체에 온전히 통합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정립하는 변증법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미분소의 의미가 적분을 통해서 확정되며, 적분은 미분소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즉 일반의지와 개인의 자율은 “상호적”이며, 이런 상호성으로부터 헤겔(G. W. F. Hegel)이 예시된다. 다른 한편, 일반의지는 적분모델의 토대 위에서만 전체의 내재성이라는 루소 정치철학의 획기적인 함의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주권의 양도불가능성이 도출된다. 일반의지가 본질이 아닌 전체를 포괄하는 관계일 뿐이라면 그것의 양도나 대리는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의 내재성은 도덕이나 심지어 종교의 심급이 초월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오히려 도덕이나 종교가 인간사회의 내재성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된다. 시민의 미덕이나 시민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일반의지의 구성과 보존을 위해 요청되는 것과 같다. 이 점에서 루소는 칸트를 예고한다.

이런 결론에 대한 평가는 진지한 철학사적 고찰을 필요로 하며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지점은 이런 과감한 해석 앞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이고 정당한 의문에 있다. “무한히 작은 차이들의 합”과 같은 비직관적이며 비현실적인 이론을 모델로 하는 정치이론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하는 공허한 이상이 아닌가? 필로넝코의 가장 논쟁적이며 놀라운 점은 이런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함으로써 루소 정치철학

의 잊혀진 의미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원리로 제시했던 것이 여기에서는 조건이 된다. 적분으로서의 일반의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개별의지들이 서로 연속을 이를 정도로 작은 차이만을 가져야 하며, 부분사회가 형성되지 않도록 그 수가 무한해야 한다. 앞에서 정리한 적분으로서의 일반의지의 특징들은 모두 이 조건들의 충족을 전제한다. 그런데 개별의지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사회의 발전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아직 개인의 욕망이나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발달하지 않고 개별자들이 상당한 양의 기본욕구를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한 『사회계약론』 4권 1장의 정치체 타락의 역사는 일반의지의 파괴불가능성을 표현하는 만큼이나 그것의 실현불가능성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일반의지는 권리의 차원에서 언제나 실재할 것이고, 어떤 정치체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정치체가 완전한 적분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은 영영 부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적분이 아니고서는 정치체가 전 인민의 자유로운 종속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의 발전과 인간본성의 변화에 의해 일반의지가 사실로서 존재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 맥락에서 인류사회의 타락의 조서를 써내려간 『불평등기원론』(*Discours sur l'inégalité*)은 정치체의 정의로운 설립을 요구하는 『사회계약론』의 불가능성을 확인하며, 두 텍스트의 일관성은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sup>11)</sup> 2권 3장의 마지막 문단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암시한다. “솔론, 누마, 세르비우스가 그랬듯이, 부분사회가 있다면 그 수를 늘려야 하고 그들 사이의 불평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적분이 온전히 계산될 수 없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는 그 근사치라도 구해봐야 한다는 낙담이 서려있다. 필로넝코는 사회계약, 일반의지, 법과 주권이론을 제외한 『사회계약론』의 나머지 요소들 즉 입법자, 정부형태, 시민종교 등에 대한 논의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적분의 근사치를 구해보려는 시도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계약론』의 염세주의는 이러한 조치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분으로서의 일반의지의 최종적 의미는 그것의 불가능성이다. 일반의지의 “수학

11) 절망의 확인인 『불평등기원론』과 희망의 설계도처럼 보이는 『사회계약론』의 이념적 모순은 루소 철학의 일관성을 부정하기 위해 자주 동원되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필로넝코는 후자의 의미를 역전시킴으로써 두 텍스트의 체계를 구하려 한다. 이와 반대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 전자의 결론에 뉘앙스를 주면서 루소 사유의 일관성을 구하려는 노력으로는 스타로뱅스키(Starobinski 1964)를 참고하라.

적 진실”은 현재의 인간사회가 그러한 엄밀성과 정확성을 지닐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 루소는 정당한 정치적 권리의 필연적 원리를, “단한” 미래와 현실 정치체의 “유한성”<sup>12)</sup> 속에서 절망스럽게 탐구했다는 것이 필로넝코의 가장 중대한 결론이다.

루소 이후의 정치가와 철학자들은 루소의 절망에서 시작해야 했다. 프랑스의 혁명가들 일부는 이런 절망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루소를 왜곡함으로써 그에게 충실하려고 애썼다. 이것은 그들이 18세기라는 시대에 여전히 간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시에스(Emmanuel-Joseph Sieyès)와 같은 개혁가들은 역설적으로 루소의 절망을 통해 대의제와 같은 반 루소적인 제도를 정당화했다.<sup>13)</sup> 필로넝코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 같은 시기 칸트는 루소의 불가능한 이상을 윤리학적 “이념”(Idee)으로 변환시키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와 사유를 위해 루소의 불가능성을 사실로서 받아들임으로써, 루소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루소에 게서 멀어져갔다. 뤼 페리와 알랭 르노는 그들의 이념적 지향과 상관없이 19세기 사상이 루소의 절망을 “지양”(Aufhebung)함으로써만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고 진단한다(Ferry and Renaut 2007, 502).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진정한 지양이 있어야 했고, 진정한 지양이 있기 위해서는 절망적인 실패가 있어야 했다. “수학적 진실”로서의 정치적 권리와 폭력의 전개로서의 역사적 사실 사이의 메꿔질 수 없는 간극을 직시하며, 루소는 기꺼이 그러한 실패를 제공해주었다.

## V. 상식적 해석의 갱신: 라디카(G. Radica)

그러므로 일반의지 개념의 토대를 설명하는 『사회계약론』 2권 3장의 수학적 언어에 대해서, 한편에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산술이 유발하는 전체주의와 형식주의의 위험이, 다른 한편에는 적분모델과의 미묘한 관련성을 통해 실천적 불가능성을 순수한 형식의 이론적 역량으로 승화시키는 곡예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양극단의 태도 사이에서, 루소의 수학적 진술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길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일반

12) 필로넝코 책에서 『사회계약론』을 분석하는 나머지 두 챕터의 제목은 각각 “유한성과 정치”(Finitude et politique), “닫힌 것과 열린 것”(Le clos et l’ouvert)이다.

13) 페리·르노(Ferry and Renaut 2007, 509-513)는 필로넝코의 일반의지 해석과 시에스의 대의제 개혁을 하나의 정치적 역사로 연결한다.

의지를 전체주의로 해석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2권 3장의 구체적 독해에 기초해 일반 의지의 토대를 재규정하려는 노력이 구상될 법하다. 이것이 2003년 라디카가 필로넝코의 해석을 비판하며 시도한 작업이다.

라디카는 필로넝코의 해석을 수학적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비판한다. 수학적 측면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일관성의 문제로 수렴된다(Radica 2003, 264-265). 하나는 필로넝코가 일반의지를 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에 비유하면서도 그것의 라이프니츠적 “실체”의 성격을 말할 때에는 대수적 급수에 비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비판은 부당하다. 필로넝코는 일반의지를 적분의 결과 얻어진 값, 앞선 예를 다시 들자면 어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에 비유한다. 이때 적분값은 선분이나 다름없는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으로 규정된다. 구분구적법에서는 이 넓이들의 합의 일반항(사각형 n개의 넓이의 합)을 구한 다음 그 극한값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적분값은 어떤 “급수의 법칙”의 극한값이며, 기하학적 비유와 대수적 비유는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수학적 비판의 두 번째 요소는 필로넝코가 미분소의 의미를 고정시키지 않고, 때로는 개별의지들 사이의 작은 차이를, 때로는 개별의지들 자체를 지시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두 번째 비판 또한 필로넝코의 논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는 필로넝코의 해석에서 각 개별의지가 어떤 공통요소  $d'$ 와 미분소들의 합으로 정의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분소가 연속적인 인접 개별의지들의 무한히 작은 차이를 규정한다는 사실과, 그 차이로 인해 각 개별의지가 정의된다는 사실은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수학적 비판에 비해 정치적 비판은 훨씬 더 주목할 만하다(Radica 2003, 265-267). 라디카는 정치적 비판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것들은 결국 두 가지 원리로 수렴된다. 하나는 적분으로서의 일반의지가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와 정의의 문제다. 필로넝코는 마스터스가 일반의지 개념의 불충분함으로 지적했던 형식주의를 개념의 정당한 본질로 역전시켰다. 라디카는 일반의지의 정의(justice)가 형식적 요소만으로 잘 설명될 수 있는지 묻는다는 점에서 마스터스의 근심을 공유한다. 일반의지가 “항상 바르고 언제나 공적 이로움을 향한다”는 사실이 적분모델에 의해 규명될 수 있는가? 개별의지들의 “작은 차이”와 “수”만을 조건으로 갖는 적분모델에서 일반의지는 언제나라도 나쁜 결론에 이를 위험을 가지지 않는가? 두 번째 비판은 적분모델의 형식주의와 개인의 문제다. 적분모델은 개별자들을 무수히 많고 무수히 작은 동질적 요소로 상정한다. 그리고 적분 과정에서 개인들(미분소)은 전체의 의

미(적분값)를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통합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치체의 활동에서 개인들의 주관적 경험이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가?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에서 개인은 일반의지의 재료가 될 뿐 그 자신은 일반성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 두 가지 정치적 비판으로부터 라디카가 제안하는 대안적 해석의 원리가 도출된다(Radica 2003, 267-275). 즉 일반의지의 토대는 실질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은 일반의지에 통합되며 일반성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라디카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둔 채 2권 3장의 구조가 첫 문단에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의 기초적 독해 또한 첫 문단에서 일반의지의 항상적 정의와 인민의 불안정한 심의, 그러니까 일반의지의 원리적 정당성과 그것을 실제적으로 도출하는 어려움이 대조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라디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이 각각 이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해명하는 와중에 그가 설정한 두 조건을 충족시킬 일반의지의 토대를 추론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일반의지의 구성을 규정하는 표현은 “서로 상쇄되는 더 큰 것들과 더 작은 것들”이었다. 우선 라디카는 이 “상쇄”를 스칼라합과 대비되는 벡터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자문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반의지는 어떠한 정치적 기교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라디카는 이런 식의 이해는 일반의지가 0이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길딘(H. Giddin)이 제안한 가설이 검토된다. 이 가설에 따르면 모두의 의지는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에 비교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의지는 좀 더 추론적인 종합과정을 거쳐 도출된다. 예를 들어, 전체의 안위를 위해 어떤 영리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있다면 시민 각자에게는 자기 자신만 빼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이로운 것이다. 이때 이런 의견들의 총합은 모든 시민이  $n-1$  명의 찬성, 그러므로 거의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그러한 법안을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하지만 이 경우 각 개별의지는 외부의 강압에 의해 제압당하는 꼴이 된다. 이것을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의 온전한 통합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상쇄”에 대해 가능한 마지막 가설은 시민 각자가 이성적 반성을 통해 자신 안에서 “일반화될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여 개별의지를 일반화시킨 다음 그렇게 불순물이 제거된 “차이들의 합”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자가 보편성의 차원에서 자신의 개별의지를 평가하고 극복하는 반성적 과정을 함축한다. 이처럼 라디카는 “상쇄”를 형식적이고 집단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질적이고 개인적인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일반의지

에 칸트식의 윤리적 반성을 도입한다.

그렇다면 “작은 차이들의 합”과 부분사회에 대해 말하는 세 번째 문단의 함의는 무엇인가? 라디카는 두 번째 문단이 개인적 추론 문제를 다루는 것과 달리 세 번째 문단은 인민의 “심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믿는다. 일반의지는 보편적 이성의 차원에서 원리적으로 실재하고 있으며, 각 개인은 반성을 통해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인민의 정치적 심의, 예를 들어 투표에서는 모두가 그런 결론에 도달한 채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들은 “작은” 차이들이라 심의의 전체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부분사회의 악영향은 개인의 내적 반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부분사회의 수를 늘리는 등 전체심을 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는 것도 아니다. 라디카는 여기에서 보편성의 반성을 수행하는 인민들에 대한 “수학적이라기보다는 통계학적인 낙관주의(Radica 2003, 274)”를 말한다. 이렇게 낙관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라디카는 루소 안에서 부분사회와 다수결원리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라디카는 2권 3장에서 정의의 원리적 차원과 심의의 정치적 차원을 분리한 후, 보편성에 대한 반성을 두 과정 모두의 토대로 설정한다. 일차적으로는, 두 번째 문단의 “차이들의 합”과 세 번째 문단의 “작은 차이들의 합”은 각각 개인적 반성의 차원과 인민의 심의라는 다른 대상을 지시하므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분리를 통해 라디카는 자유주의 지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일반의지의 이중적 지위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의지에서 전체주의의 혐의를 벗겨낸다. 일반의지는 반성의 차원에서 선험적 실재성을 가지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반드시 강압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2권 3장의 수학적 진술은 두 번째 문단에서만 인정할 수 있으며, 그것도 일반의지가 실제로 수학적 토대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 반성의 원리적이고 엄밀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라디카는 권리와 사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은 하되 둘 사이를 오로지 전체주의의 함의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벌린다. 간극은 필로넝코가 측정한 것에 비하면 극히 작은 수준에 머문다. 두 차원 모두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적 숙고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개별의지의 일반성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그러한 개별의지들의 수렴을 희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보편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

라디카의 해법은 일종의 중도적 길을 개척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라디카는 사실 마스터스식의 상식적 모델을 칸트적 요소를 이용해 갱신하고 있

다. 정치적인 관점을 제외하고 오직 개념적인 영역에서 말한다면, 라디카와 마스터스 사이는 이 둘과 필로넝코 사이보다 훨씬 가깝다. 필로넝코가 “상쇄”를 “합”과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개별의지의 박탈을 부정한다면, 마스터스식 모델이나 라디카는 “상쇄”를 “합”의 연산 이전에 실행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며 개별의지의 사전가공을 요청한다. 전자의 경우 순전히 양적인 것으로 규정된 “상쇄”가 개별의지를 외부에서 억압한다면, 후자에서는 개별의지의 가공이 자발적 반성이라는 질적 과정으로 치환되었을 뿐이다. 또한 필로넝코가 일반의지의 정당성을 개별자들이 구성하는 내재적 관계로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나머지 둘은 일반의지를 결코 순수한 관계의 측면에서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일반의지가 어떤 실질적 정의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무엇보다 마스터스식 모델과 라디카가 루소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이 어떤 낙관주의의 이미지를 일반의지에 부여하는 반면, 필로넝코는 거기에서 한 시대의 문을 닫을 정도의 비판주의를 보며 오직 이 비판주의에서만 일반의지의 진정한 개념적 힘이 증명된다고 생각한다.

상식적 독해의 갱신을 통해 라디카는 필로넝코가 그 최대치까지 강조한 루소의 절망을 완화시키려 한다. 이때 칸트를 떠올리게 하는 보편성에 대한 속고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점은 시사적이다. 이것은 루소라는 문제적 사유를 수용하는 온건한 방식으로서 칸트가 열어놓은 길의 효율성을 예시한다. 물론 루소가 시민 각자의 반성과 미덕을 일관되게 요구한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자가 미덕의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정치체는 금방 붕괴할 것이고, 시민종교는 시민의 미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제안된다. 그런데 라디카의 해석은 상식적 절충주의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루소에게서 순수한 정치적 권리의 차원과 그것의 윤리적 지지를 포함하는 경험적 실천의 차원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간과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전략적 절충주의가 칸트식 해결책에 안주함으로써 루소의 사유가 가진 진정한 힘이 미처 활용되지도 못하고 소진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 필로넝코는 라디카가 정치적 측면에서 비판한 것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구체적 정의의 문제는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사적인 반성은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의 종합을 설명할 때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또한 우리가 일반의지의 형식성이 갖는 강력한 함의를 온전히 인식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그것의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전망을 기대한다고 반박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루소에게는 사실에서 권리를 분리하고, 그렇게 추론된 권리를 통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비판적 사유

의 제1원리였음을 상기시킬 것이다.

## VI. 결론: 닫힌 미래와 열린 역사

필로넝코는, 텔만이 전체주의의 기원을 보고 마스터스가 형식주의의 공허함을 보았던 일반의지의 “수학적 진실”에서 이 문제적 개념의 진정한 지위와 필연적 절망을 본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론을 일반의지 개념의 토대로 도입했다. 필로넝코가 자인하는 바, 루소가 미적분이론을 일반의지 개념의 토대로 삼는 절차는 “불완전”하며, 엄밀한 추론보다 “유비”에 근거한다(Philonenko 1984, 32). 이런 관점을 인정한다면, 루소는 『사회계약론』 2권 3장에서 적분을 그대로 정치철학에 옮겨온 게 아니라, 다만 적분이론에서 미분소와 적분값의 관계, 오류보정의 개념적 함의, 적분의 조건으로서의 연속성 등을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의 정당한 관계를 구성하는 이론적 틀로 빌려왔을 뿐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느슨한 연관이 일반의지를 순전히 수학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라디카의 수학적 비판을 필로넝코의 관점에서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또한 얼마든지 반대의 논변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달리 라디카의 정치적 비판은 루소 사유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관찰 가능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이고 개념적인 대립을 드러낸다. 일반의지 개념에서 형식적 정당성의 차원 이상을 긍정하려는 모든 노력은 일반의지를 어떻게든 이후의 사상, 실천과 연결시키려 한다. 이 점에서는 20세기를 물들인 정치적 폭력의 기원을 생각하는 마스터스나, 칸트와의 사상사적 연결을 이용하는 라디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필로넝코와 같이 일반의지의 고유함을 순수한 형식성에서 찾는 쪽은 일반의지의 힘이 그 비역사적 성격 혹은 역사적 불가능성에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 글에서 후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다.

카시러의 제자이자 카시러처럼 나치의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를 피해 망명한 철학자 바일(Eric Weil)은 1952년 그러니까 텔만이 전체주의를 고안했다는 죄목으로 루소를 고발하고 있을 때 루소의 정치이론을 해설하고 옹호하는 열정적인 논문을 썼다. 그는 결론에서 이렇게 역설했다. “그것[루소의 이론]은 터를 치웠고, 터를 치움으로써 인류를 호출하여 거기에 무엇인가를 건설하도록 했다. 이게 다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것이다. 그의 이론은 우리 세계의 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못했

지만, 오직 권리만이 국가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었다(Weil 1984, 37-38).” 누구도 칸트와 전체주의를 횡단하며 사유한 이 철학자보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루소는 구시대에 권리임을 자처한 모든 것이 결국 폭력임을 입증하려 했고, 그렇게 가짜 권리들이 사라진 세계에서 어떤 것이 권리로 불리기 위한 최소한의 논리적 조건을 사유했다. 우리가 볼 때 일반의지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필로넝코의 해석은 바일의 이런 결론에 정확한 뉘앙스를 부여한다. 루소가 권리의 필연성을 말하면서 “구체적” 권리를 말하지 않았다면, 권리의 조건이 오직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언어로 말해져야 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권리의 경험적 불가능성이 인간사회의 진실로서 확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권리를 경험과 사실의 차원에서 최대한 분리하고 권리와 사실의 메꿔질 수 없는 간극을 직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루소의 “엄청난 것”이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간극의 절망에 의해 미래가 닫혔을 때에야 새로운 사유와 역사, 그러니까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단순한 계몽주의적 대립을 넘어선 사유와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음을 관찰해야 한다. 사유와 역사의 변증법이 가능하기 위해 권리와 사실의 모순이 가장 형식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했던 것이다.

투고일: 2017년 1월 02일

심사일: 2017년 2월 01일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23일

## 참고문헌

- 김용민. 2016. “루소와 공화주의.” 『한국정치연구』 25집 1호, 167-192.
- 장세룡. 2000. “루소의 일반의지론에서 투표의 문제.” 『대구사학』 59집, 113-149.
- Andersen, Kirsti. 2011. “One of Berkeley’s arguments on compensating errors in the calculus.” *Historia Mathematica* 38. No 2, 219-231.
- Belaval, Yvon. 1960. *Leibniz critique de Descartes*. Paris: Gallimard.
- Bernardi, Bruno. 2014. *La fabrique des concepts. Recherches sur l’invention conceptuelle chez Rousseau*. Paris: Honoré Champion.
- Blay, Michel. 1986. “Deux moments de la critique du calcul infinitésimal : Michel Rolle

- et George Berkeley.” *Revue d’histoire des sciences* 39, 223-253.
- Derathé, Robert. 1950. *Jean-Jacques Rousseau et la science politique de son temps*. Paris: J. Vrin.
- Diderot, Denis, and d’Alembert, J. L. R., eds. 1751-1772.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http://encyclopedie.uchicago.edu> (검색일: 2016. 12. 1).
- Ferry, Luc, and Renaut, Alain. 2007. *Philosophie politique*. Paris: PUF.
- Gillispie, Charles C., and Youschkevitch, Adolf P. 1979. *Lazare Carnot Savant et sa contribution à la théorie de l’infini mathématique*. Paris: J. Vrin.
- Masters, Roger D. 2002. *La philosophie politique de Rousseau*. Lyon: ENS Editions.
- Philonenko, Alexis. 1984. *Jean-Jacques Rousseau et la pensée du malheur 3. Apothéose du malheur*. Paris: J. Vrin.
- Radica, Gabrielle. 2003. “Le vocabulaire mathématique dans le *Contrat social*, II, III.” In Bernadette Bensaude-Vincent and Bruno Bernardi, eds. *Rousseau et les sciences*, 257-275. Paris: Harmattan.
- Rousseau, Jean-Jacques. 1959. *Les Confessions*. Bernard Gagnebin and Marcel Raymond, eds. *Œuvres complètes I*, 1-656. Paris: Gallimard.
- \_\_\_\_\_. 1964.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Bernard Gagnebin and Marcel Raymond, eds. *Œuvres complètes III*, 347-470. Paris: Gallimard.
- \_\_\_\_\_. 1974. Henri Gouhier eds. *Lettres philosophiques*. Paris: J. Vrin.
- Spector, Céline. 2011. *Au prisme de Rousseau : usages politiques contemporains*. Oxford: Voltaire Foundation.
- Starobinski, Jean. 1964. “Du *Discours de l’inégalité* au *Contrat social*.” In *Etudes sur le Contrat social de Jean-Jacques Rousseau. Actes des journées d’étude*, 97-109. Paris: Les Belles Lettres.
- Talmon, J. L. 1960. *The Origins of Totalitarian Democra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 Weil, Eric. 1984. “Rousseau et sa politique.” In Gérard Genette and Tzvetan Todorov eds. *Pensée de Rousseau*, 9-39. Paris: Seuil.

ABSTRACT

---

## The Mathematical Foundation of the General Will and its Pessimism:

Masters, Philonenko, Radica on *The Social Contract*,  
Book II, Chapter 3

Younguk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book II, chapter 3 of *The Social Contract*, Rousseau proves the existence and the legitimacy of the “general will” by distinguishing it from the “will of all” and explaining its calculation. However our comprehension runs into difficulty due to the mathematical language that dominates this short chapter. Three interpretations have been presented on this problem, which chronologically constitute a dialectical process, but conceptually still reserve an essential opposition between two historical philosophies. Masters criticizes the oppressive formalism of the general will, Philonenko refers to the infinitesimal calculus to reconceptualize this formalism, and finally Radica attempts to find a reconciliatory way to moderate this confrontation by introducing a Kantian element. However, it is brought to light that this dialectic is structured by a conflict between optimism and pessimism on the possibility of the general will and on the history. Only by demonstrating the pessimistic perspective through the specific mathematical model, Philonenko could have shown the powerful effect of the general will that had put an end to the optimism of the Enlightenment.

**Keywords:** Rousseau, Philonenko, *The Social Contract*, general will, will of all, infinitesimal calculus, optimism, pessimism